

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목) 10:30 배포: 2026. 4. 2.(목) 08:30

다자녀가구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사각지대 해소로 더 촘촘해진다.

- 국민권익위,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 제도 개선 권고

-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감면 근거가 미비하고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요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권고했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 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만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같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지역별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제안형식으로 전달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송영희 (044-200-7231)
		담당자	사무관	주재선 (044-200-7230)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요금감면
#KTX기차역